

재정

는 의약품 로열티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적자폭이 17억5천만 달러 축소된 36억3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운송수지는 30억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나 물동량 감소, 컨테이너 등 화물운임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흑자폭이 31억7천만 달러 감소했다. 또한 건설서비스수지는 2012년 이후 해외건설 수주 감소 영향 등으로 건설서비스 수입이 감소해 전년 대비 흑자폭이 48억 달러 감소한 104억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

본원소득수지는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투자소득수지 흑자 규모(2015년 59억5천만 달러, 전년 대비 13억5천만 달러 증가)가 개선되면서 전년보다 17억5천만 달러 증가한 5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전소득수지는 전년 대비 3억7천만 달러 적자폭이 축소되면서 46억1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전소득 수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89억2천만 달러인 반면 이전소득 지급은 3억2천만 달러 축소됐다.

	2014		2015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경상수지	843.7	264.5	224.4	279.2	291.1	264.9	1059.6	
상품수지	888.9	251.4	242.2	336.8	306.4	318.4	1203.7	
서비스수지	-36.8	-3.8	-43.9	-30.8	-35.5	-46.7	-157.1	
본원소득수지	41.5	29.3	38.3	-15.6	27.3	9.0	59.0	
이전소득수지	-49.8	-12.4	-12.2	-11.1	-7.0	-15.8	-46.1	
자본·금융계정	893.2	283.3	237.8	286.5	295.9	275.5	1096.3	
직접투자수지	187.7	54.6	43.9	74.7	49.2	58.2	226.0	
증권투자수지	306.1	94.1	78.4	69.9	151.0	196.8	496.1	
파생상품수지	-38.3	8.1	-0.4	-4.6	40.4	-10.1	25.3	
기타투자수지	259.0	187.9	45.1	73.7	98.4	11.1	228.3	
준비자산증감	178.9	-61.4	71.1	73.0	-42.9	19.3	120.5	

■ 자본·금융계정

2015년 자본·금융계정은 1천96억3천만 달러 순자산 증가를 기록해 전년보다 순자산 증가 규모가 203억1천만 달러 확대됐다.

기타투자(228억3천만 달러)는 순자산 증가규모가 축소된 반면 직접투자(226억 달러)와 증권투자(496억1천만 달러)는 순자산 증가규모가 각각 38억3천만 달러, 190억 달러 확대됐다.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전년도 순자산 감소(-38억3천만 달러)에서 25억3천만 달러 순자산 증가로 전환됐다.

이는 경상수지 흑자로 크게 증가한 국내 유입 자금이 해외투자, 해외차입금 상환, 해외 대출 등 자본·금융 계정을 통해 활용된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은 3천679억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43억7천만 달러 증가했다.

■ 재정운용 여건

2015년은 1분기 0.8%를 기록하는 등 2014년부터 추진한 확장적 거시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듯했으나 장기간의 가뭄 및 메르스의 여파 등으로 소비 및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돼 2분기 0.3%를 기록하며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꺾였다.

주요국 경기둔화 및 저유가에 따라 수출마저 부진해 2015년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우려되고 저성장 구조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악화된 경제여건으로 인해 2014년과 같은 세입부족 우려가 확대되는 등 총수입마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부족이 현실화될 경우 자금부족으로 인해 당해연도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러한 경제여건으로 인해 기획재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당초 3.8%로 전망된 2015년 연간 경제성장률을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3.1%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동시에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등을 포함해 15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실시할 것을 발표했다.

■ 세입 규모

2015년 예산과 기금을 포괄하는 총수입은 2014년보다 3.5% 증가한 382조4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이중 국세는 221조1천억원, 세외수입은 27조6천억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5월 기준 국세수입액이 93조7천억원, 예산 대비 진도율이 42.4%에 지나지 않아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하기 전 3개년(2010~13년) 평균 진도율인 47%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경기위축 우려로 인해 연말 세수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입경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확정됐고 2015년 국세 세입예산은 5조4천억원이 삭감된 215조7천억원으로 결정됐다.

2016년 2월 세입·세출마감 자료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당초 전망 대비 3조2천억원이 부족하고 추경예산 대비 2조2천억원 초과한 217조9천억원으로 기록됐다.

이는 경기회복세의 지연, 기업 실적 둔화 등으로 세수가 연초 예상보다 감소했으나 추경 이후 빠른 경제회복으로 세수가 회복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지출 규모

국회에서 확정된 2015년 총지출 규모는 375조4천억원으로 2014년 예산 355조8천억원보다 5.5%가 증가했다.

이는 2013~17년 중기재정계획보다 7조원 확대되고 2014년 예산보다 약 20조원 확대된 규모로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매우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였다.

메르스 및 가뭄에 따른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6월 25일 추경을 포함해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할 것을 발표하고, 7월 3일 12조원 규모의 추경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방안을 정부안으로 보도했다.

추경예산은 전반적으로 메르스·가뭄 극복,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됐다.

메르스 극복을 위해 2조5천억원을 증액해 의료기간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관광업계에 대한 자금난 해소 및 수요창출 지원을 확대했다.

가뭄 및 장마대책으로 저수지 확충, 농산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해 8천억원의 지원책도 마련했다. 또한 서민생활 및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투자도 2조9천억원 수준으로 병행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집행하도록 했다.

한편 기금 자체변경, 공공기관 및 민자사업 투자확대, 금융성 지원 확대 등과 강력한 집행관리를 병행해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돼 2015년 총지출은 384조7천억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전년대비 8.1%, 본예산 대비 2.5%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기재부와 행자부의 협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추경 및 집행을 제고도 함께 독려했다. 이로 인해 2014년에 23조3천억원에 불과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연중 추경은 2015년에 34조7천억원을 초과해 전년 대비 11조원이 넘는 수준의 지방자치단체 추경을 이끌어냈다.

본예산의 확장적 편성과 더불어 22조원 수준의 재정보강, 지방자치단체의 추경 독려 및 집행관리 강화 등을 통해 2015년 2~3분기 국민계정 상의 정부 성장기여도는 각각 0.7%p, 0.9%p를 기록했다. 이와 같이 2분기 연속 전기대비 0.7%p를 상회한 것은 2000년 통계작성 이후 최초이다.

한편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효과로 2015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3%를 기록하는 등 확대 재정정책은 메르스 등에 의한 경기침체의 우려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2009년 이후 최초로 연간 0.8%p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당초 본예산 상의 2015년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는 7조원의 흑자(GDP 대비 0.4%), 관리재정수지는 33조4천억원의 적자(GDP 대비 -2.1%)로 전망됐다.

관리대상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와 공적자금 상환소요를 제외한 재정수지이다.

사회보장성기금은 장래 연금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적립단계에 있어 흑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재정운용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정의 건전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지 산정 시 이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

2015년 국가채무는 569조9천억원(본예산)으로 GDP 대비 비율은 전년 대비 1.8%p 상승한 36.9%로 전망됐다.

그러나 추경예산의 국회확정으로 총지출은 늘어난 반면 총수입은 줄어들어 통합재정수지는 7조원의 적자(GDP 대비

0.5%), 관리재정수지는 46조5천억원의 적자(GDP 대비 -3.0%)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국가채무도 25조2천억원 늘어난 595조1천억원으로 GDP 대비 비율은 본예산대비 1.6%p, 전년 대비 3.4%p 상승한 38.5%로 전망됐다.

2015년 재정총량 지표 현황

(단위 : 조원 %)

	2014년 (A)	2015년		증 감	
		본예산	추경(B)	(B-A)	%
총 지출	355.8	375.4	384.7	28.9	8.1
총 수입	369.3	382.4	377.7	8.4	2.3
통합재정수지	13.5	7.0	-7.0	-20.5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	-25.5	-33.4	-46.5	-21.0	
(GDP대비, %)	[-1.7]	[-2.1]	[-3.0]	[-1.3%p]	
국가채무	527.0	569.9	595.1	68.1	
(GDP대비, %)	[35.1]	[36.9]	[38.5]	[-3.4%p]	

■ 향후 재정운용 방향(20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1. 재정총량

정부는 국가 발전전략을 뒷받침하는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중장기적 시계를 적용해 재정운용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우고 당해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는 2015~19년 기간 중에 경기 회복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4~18년 계획의 기본 흐름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경기대응 노력을 배가하는 한편, 각 분야별로도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경제활력 강화 노력을 병행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4대 부문 구조개혁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특히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고용 기회 확대,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제고, 공교육 정상화 및 지방교육재정 개혁, 새로운 금융모델 도입 등을 재정적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재정건전성 회복의 기틀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 감소에 대응해 2015~19년간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 보다 낮게 관리하고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세입기반 확충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재정수지 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페이그o' 원칙을 비롯한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규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중기 재정운용 모습을 전망했다. 2012년부터 지속된 세수결손의 고리를 끊기 위해 재정수입을 보다 보수적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재정수입은 2015~19년 기간에 연평균 4.0% 수준

증가해 2014~18년 계획 상 증가율보다 연평균 1.1%p(5.1% → 4.0%)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재정지출의 증가율은 보수적인 재정수입 전망 하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4~18년 계획 상의 증가율보다 1.9%p와 낮게 설정하는 등 대폭 하향 조정(4.5% → 2.6%)했다.

정부는 균형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1.4%p 낮은 수준으로 관리해 재정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의 추진 등으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이전 계획보다는 다소 악화(-1.0% → -1.4%)될 것으로 예상되나, 세입기반 확충 및 세출절감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2015년의 GDP 대비 -2.1%에서 2019년 -0.9%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도 40%대 초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 중기 자원배분 기본방향

중기 자원배분은 ①맞춤형 복지, 청년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 ②성장동력 창출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선제적 투자 ③고령사회, 통일 등 미래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등 국민체감도를 높이는 재정운용을 기본방향으로 할 계획이다.

우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일·학습병행제 확산 및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구조체계 확립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안전 R&D 등을 통해 관련 산업 투자를 촉진할 것이다.

보편적 문화향유권의 확대를 위해 문화 분야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도 지속 추진한다.

다음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혁신거점화, 창조경제밸리 글로벌 허브 육성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FTA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및 농촌 정착비용 최소화 지원도 병행한다.

마지막으로 고령사회, 통일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여성고용 지원을 확대하고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 통일 시대 준비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3. 재정건전성 제고 추진 방안

한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총량 관리 외에도 단계적인 추진전략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자산운용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비효율성이 잔존해 있는 지방재정 및 정부 R&D를 혁신하는 등 재정체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등 부정·불법을 근절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및 국유재산 개발 및 관리 등을 통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해 재정을 절감할 것이다.

2015~19년 중기 재정총량 전망

(단위: 조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재정수입	382.4	377.7	391.5	406.8	426.6	446.6	4.0
국세수입	221.1	215.7	223.1	233.1	244.2	255.6	3.7
세외수입	27.6	28.3	27.2	26.6	26.7	26.7	-0.8
기금수입	133.6	133.6	141.2	147.0	155.8	164.3	5.3
재정지출	375.4	384.7	386.4	396.7	406.2	416.0	2.6
예산지출	260.1	263.6	262.8	271.4	275.7	278.6	1.7
기금지출	115.3	121.1	123.6	125.3	130.5	137.3	4.5
관리재정수지	-33.4	-46.5	-36.9	-33.1	-25.7	-17.7	
(GDP 대비)	(-2.1)	(-3.0)	(-2.3)	(-2.0)	(-1.4)	(-0.9)	
국가채무	569.9	595.1	644.9	692.9	731.7	761.0	
(GDP 대비)	(36.9)	(38.5)	(40.1)	(41.0)	(41.1)	(40.5)	

조세

■ 2015년 국세 징수 실적

2015년 우리 국민이 납부한 국세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217조9천억원이다.

이는 2014년 실적(205조5천억원)보다 12조4천억원(6.0%) 증가한 것이고 2015년 예산(215조7천억원)보다는 2조2천억원(1.0%) 증가한 수준으로 4년 만에 세수결손을 탈출했다.

2015년 세수 실적이 개선된 것은 ①부동산 거래량, 증권거래대금 증가 등 자산시장의 호조와 ②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법개정 효과 ③세정노력 등에 주로 기인한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14년 실적(199조3천억원)보다 11조5천억원 증가한 210조8천억원이 징수됐고 특별회계는 2014년 실적(6조2천억원)보다 9천억원 증가한 7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60조7천억원이 징수돼 2014년 실적(53조3천억원)보다 7조4천억원이 증가했다.

소득 종류별로는 근로소득세가 27조1천억원으로 2014년 실적(25조4천억원)보다 1조7천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취업자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 등에 기인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3조9천억원 증가했고 개인사업자 신고실적 개선 등으로 종합소득세가 1조3천억원 증가했다. 다만 저축성 수신 평균금리 하락 등으로 이자소득세는 4천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비과세·감면 정비, 사전 성실신고 지원 효과 등으로 2014년 실적(42조7천억원)보다 2조4천억원 증가한 45조원을 기록했으나 부가가치세는 수입 부진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에 따라 2014년 실적(57조1천억원)보다 3조원 감소한 54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관세의 경우 수입 부진에 따라 2014년 실적(8조7천억원)보다 2천억원 감소한 8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개별소비세는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발전용 유연탄 과세 등으로 2조4천억원 증가했으며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1조5천억원 증가했다.